

## 규제 수용성의 결정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

저자 (Authors)	김효기, 심준섭
출처 (Source)	<a href="#">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3)</a> , 2012.9, 33-64(32 pages) <a href="#">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22(3)</a> , 2012.9, 33-64(32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a>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ld=NODE07516914">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ld=NODE07516914</a>
APA Style	김효기, 심준섭 (2012). 규제 수용성의 결정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3), 33-64
이용정보 (Accessed)	중앙대학교 165.***.103.27 2020/07/17 14:26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규제 수용성의 결정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김효기\*(중앙대학교 박사과정)·심준섭\*\*(중앙대학교)

exchange0001@yahoo.co.kr ; jsshim@cau.ac.kr

---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금융규제 정책은 직접적인 대상인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감독규제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는 금융규제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는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이 금융감독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금융규제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은 대상기관의 신뢰를 증진시키며, 신뢰는 금융규제의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금융규제 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보다 분명한 관계를 실증분석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 주제어: 금융감독규제기관, 신뢰, 금융규제, 규제 수용성

---

### I. 문제제기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급속히 팽창함에 따라 금융자산도 빠른 속도로 축적되어, 1975년 28조원에 불과했던 금융자산은 2010년에는 1경원에 이르고 있다(한국은행, 2011).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산업은 국가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금융산업의 발전은 실물경제 부문의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예금자 보호, 효율적인 자금중개, 신용질서 유지 기능 등은 금융시장의 안정은 물론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금융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

---

\* 주저자

\*\* 교신저자

이 매우 큰데 비해 금융산업의 특성상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채 위기, 2008년 외화유동성위기, 2011-2012년 부실저축은행 위기 등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부문의 대내외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한국금융연구원, 2011).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 시장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다(Keys et al., 2009).

금융시장의 실패는 막대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제와 감독을 훨씬 강하게 받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Carletti & Vives, 2007; Alford, 2005; Santos, 2000; 허인혜, 2011; 방영민, 2010). 1990년대 말의 IMF 경제위기와 2007~2009년 세계적 금융위기는 거시경제(통화, 재정정책)의 실패와 금융부문에 대한 감독 및 규제의 실패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Truman, 2009; Quintyn & Taylor, 2002; Llewellyn, 1999).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실패는 금융시장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결국 납세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된다. 따라서 금융산업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금융감독규제기관과 금융규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sup>1)</sup>

금융시스템에 있어서 '좋은 규제 거버넌스(good regulatory governance)'는 금융안정성의 핵심 요인이다(Das & Quintyn, 2002). 좋은 규제 거버넌스의 중심에는 금융감독규제 기관과 규제대상 기관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좋은 금융규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대상기관의 적극적 지지와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규제대상의 신뢰는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등을 전제로 한다. 이처럼 금융산업에 대한 좋은 규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조건이나 신뢰 및 규제 수용성에 대한 국내외 실증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감독규제 기관에 대한 대상기관 종사자들의 신뢰가 금융규제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이 규제대상 기관의 신뢰를 매개로 금융규제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II. 이론적 배경

### 1. 금융감독 및 규제의 개념과 근거

2007년 말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의 재정위기로 번지면서 2012년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금융위기는 금융자율화와 규제완화라는 신자유주의적 접근에 대한 회의와 반성을 불러왔고, 적절한 금융감독 및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금융상품의 가격이 경쟁가격으로 형성되면 자본 배분의 효율성이 유지되어 궁극적으로 시장 내에서의 후생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금융산업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정보 비대칭성과 외부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 만큼 시장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Quintyn & Taylor, 2002; Llewellyn, 1999). 금융계약 당사자 간에 보유하는 정보의 질과 양의 차이는 정보 비대칭성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나아가 국가 전반의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Gilad, 2008; Hellman, Murdock, & Stiglitz, 2000; Llewellyn, 1999; Boot & Thakor, 1993; Fischel, Rosenfield, & Stillman, 1987; 금융감독원, 2012). 이처럼 금융산업의 안정성 문제는 단순히 금융기관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 국가경제 전반의 안정성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기 쉽다(김용재, 2010; 이종한, 2005). 따라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금융기관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감독과 규제를 부가하고 있다.

FRB(2005)는 금융규제(financial regulation)는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기관의 조직·행위와 관련된 법률 및 동 규칙과 규정을 집행하는 행위인 반면, 금융감독(financial supervision)은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여부 및 법규의 준수여부를 감시(oversight)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규제는 크게 금융기관 도산 방지 및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한 예방적 규제와 금융기관이 실제로 도산한 경우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호적 규제로 나뉜다(김홍범, 2002). 반면, 금융감독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금융시장의 신용질서 및 공공거래관행 확립,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 대해 인·허가, 건전성에 관한 규제, 경영개선 조치, 검사 및 제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반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금융감독원, 2012). 금융감독은 금융행위로부터 유

발되는 각종 위험이 금융시장의 불안과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여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훼손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규제행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강병호 외, 2012).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금융규제는 금융감독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금융산업 감독 및 규제는 은행법을 비롯한 법률적 근거 위에서 정당화되고 있다.<sup>2)</sup> Llewellyn(1999) 등은 금융규제의 목표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의 유지, 소비자 보호 등으로 정의하였다. Pan(2011)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및 건전성 확보, 금융시장의 개발과 성장 촉진을 두 가지 목표로 제시하였다. 비슷하게 Goohart(1998)은 금융부문의 경쟁제고 및 독점의 폐해 방지, 시스템의 안정화, 정보가 부족한 고객의 보호에 규제의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Benston(2000)은 은행 규제의 이유를, 1) 은행이 과도한 경제적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예방하며, 2) 개별 은행의 채무불능비용을 절감하며, 3) 경제에 있어서 은행 실패의 효과를 차단하며, 4) 지불제도를 보호하며, 5) 대중적으로 선출된 공직자들의 이해에 봉사하며, 6) 지방은행 보호를 위해 경쟁을 억제하며, 7)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규제는 정책도구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 2001).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확보할 경우 공공성과 안전성이 담보되고, 그 결과 금융기관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다. 금융이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사건으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일부 훼손되지만 해도 즉각 금융부문 전반에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규제를 통해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정운찬·김홍범, 2009).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금융규제 체계는 금융위원회가 규제체계의 정점에 위치하고 그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통합감독체계로 되어 있다(남주하 외, 2012). 두 기관은 각 금융거래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규칙과 규율을 마련하고 규제를 집행하기 위한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김종석·김태운, 2004). 특히 이들은 금융시스템의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해 요구, 제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2) 은행법 제1조는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을 정당하게 질서 지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규제 또는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강병호, 2005).

이처럼 기관 간 역할구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금융규제와 감독 기능은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두 기능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허인혜, 2012).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도 금융규제와 금융감독 두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Quintyn & Taylor, 200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금융규제와 금융감독을 구분하기 보다는 상위개념인 금융규제로 통일해서 표현하였다.

## 2. 선행연구 검토

금융감독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나 규제의 수용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최근까지의 금융규제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을 연구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융규제 기관의 조건이나 구조와 관련된 연구(Pan, 2011; Quintyn & Taylor, 2002; Das & Quintyn, 2002; 허인혜, 2011; 김대식·윤석현, 2005), 규제기관 또는 대상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연구(Gilad, 2008; Hellman, Murdock, & Stiglitz, 2000; Boot & Thakor, 1993; Fischel, Rosenfield, & Stillman, 1987), 금융규제의 원칙, 이론 및 철학적 근거와 관련된 연구(Weber, 2010; Walsh, 2008; Morris & Shin, 2008; Carletti & Vives, 2007; Currie, 2006; Alford, 2005; Santos, 2000; Benston, 2000; Llewellyn, 1999; Bhattacharya, Boot, & Thakor, 1998; Friedman & Friesen, 1984), 금융감독규제의 적정 수준이나 현황과 관련된 연구(Acharya, 2009; Keys et al., 2009; Jackson, 2007; Carletti, 2005; Barth, Caprio Jr., & Levine, 2004, 2001; John, Saunders, & Senbet, 2000; Stallings & Studart, 2002; Matutes & Vives, 2000; Benston & Kaufman, 1996)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방법 측면에서 서술적 사례분석(Keys et al., 2009; Carletti & Vives, 2007; Alford, 2005; Stallings & Studart, 2002; Friedman & Friesen, 1984),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 제시(Walsh, 2008), 수학적 규제모델의 제시(Matutes & Vives, 2000; Boot & Thakor, 1993), 문헌연구(Santos, 2000)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또한 금융규제 연구의 대부분은 법학자나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접근방법 측면에서 법학자들은(대표적으로, Friedman & Friesen, 1984) 금융규제의 원칙이나 근거에 대한 이론적, 인식론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경제학자들은(대표적으로, Boot & Thakor, 1993) 금융규제의 수준, 금융규제기관이나 규제대상의 도덕적 해이 등을 설명하는 수학적, 계량적 모형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특성이 어떻게 규제대상의 신뢰와 규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3)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설문 연구를 통해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특성이 신뢰를 매개로 규제대상기관 종사자들의 규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 Ⅲ. 연구설계

#### 1. 변수의 설정

##### 1) 외생변수: 좋은 금융규제 거버넌스의 조건

금융규제의 주체는 금융규제법의 관리와 집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기관이며,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기능은 규제대상자에게 부과할 제약이나 규칙 및 기준을 정하고, 규제위반자를 적발하는 데 필요한 감시 및 사실확인을 하며, 규제대상자가 받게 되는 제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김용우, 1998).

〈표 1〉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조건

저자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조건
Quintyn & Taylor(2002), Das & Quintyn(2002)	독립성, 책임성, 완전성, 투명성
허인혜(2011)	독립성, 투명성, 도덕성, 전문성
고동원(2008)	중립성, 책임성, 전문성, 투명성
산업연구원(2002; 2001)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김대식·윤석현(2005)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전문성

좋은 금융규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규제 기관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표 1〉 참조). Quintyn & Taylor(2002), Das & Quintyn(2002) 등은 금융규제 기관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독립성(independence), 책임성(accountability), 완전성

3) Jackson(2007), Das & Quintyn(2002) 등의 연구는 실증적 분석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이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integrity), 투명성(transparency)의 기준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 고동원(2008)은 중립성, 책임성, 전문성, 투명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최근 연구에서 허인혜(2011)는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가치로서 독립성, 투명성, 도덕성, 전문성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김대식·윤석현(2005), 산업연구원(2002; 2001) 역시 국내 금융감독규제 기관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조건으로서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독립성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독립성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금융감독규제 기관을 정부조직으로 운영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규제업무의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강병호 외, 2012).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규제기관 독립성의 부족은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Majone, 2005, 1997; Quintyn & Taylor, 2002; Lindgren et al., 1999). 특히 복잡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장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관이 경제규제를 담당해야 한다. 기관의 독립성은 신뢰할만한 규제 정책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나아가 규제의 권한을 독립적인 기관에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Quintyn & Taylor(2002), 허인혜(2011)는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독립성을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의 선택과 집행’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구성요소로 규제의 독립성, 감독의 독립성, 기관의 독립성, 예산의 독립성을 지적하였다. 크게 보면, 규제기관의 독립성은 두 차원으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독립과 규제적 포획(regulatory capture)으로부터의 자유로 구성된다(Das & Quintyn, 2002; Quintyn & Taylor, 2002). 정운찬·김홍범(2009) 역시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독립성을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정치적 독립성(political independence)과 피규제자로부터 포획되지 않기 위한 산업적 독립성(industrial independence)으로 구분하고 있다.

금융감독규제 기관이 정치적 혹은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적시에 필요한 정책수단 투입에 실패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규제의 독립성 확보는 소비자 책임과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



해서도 필수적이다(한국금융연구원, 2011). Majone(2005; 1997)에 따르면, 민주국가는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정치인들은 단기적 정책선호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뢰성(credibility)이 낮다. 따라서 장기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수적인 금융부에서 독립규제기구는 정부신뢰성의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Majone, 2005; 199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연구가설 1〉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독립성은 금융감독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책임성

독립적인 규제기관은 법률과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부여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권력행사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어야 한다. Das & Quintyn(2002)은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책임성을 ‘어떤 기준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되, 만일 상대방에게 어떤 과실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금융감독규제 기관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하고,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어야 한다(강병호 외, 2012). Hayward(2000)는 금융규제 기관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대상으로 1)규제기관에게 그 법적 근거를 제공한 입법부, 2)대상 금융기관, 3)일반 국민, 4)규제기관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관이나 개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간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쇄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더 많은 장치들이 요구된다. 따라서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독립성은 동시에 충분한 책임성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Quintyn & Taylor, 2002). 국제 금융규제 기구는 금융규제 기관이 금융규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인·허가, 검사, 제재 등 일련의 규제 및 감독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한다(금융감독원, 2012). 그러나 포괄적 규제권은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Goodhart, 1998).

독립적인 규제기관은 권한을 위임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동시에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 Majone(1997)은 금융규제와 같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

적인 활동은 다양한 통제 수단들의 결합을 통해서만 모니터링과 정치적 책임성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Das & Quintyn(2002)은 금융감독규제 기관이 분명하게 정의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지닌 경우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더 용이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감독 규제 기관은 금융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달성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렵다. 김용재(2004)는 관료들은 공무원 임용규정상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정책적 자율성 보장의 명분하에 정책적 판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풍토가 강하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과거 금감위 사무국은 감독업무를 관장하면서도 감독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 집행 기관인 금감원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왔다(김용재, 2004). 김대식·윤석현(2005)은 관료들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되지만, 현재 금융 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직으로는 국무총리실, 국회, 감사원이 있는데 이들은 금융관련 비전문가들이라는 커다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책임성의 약화는 신뢰성의 훼손으로 이어지기 쉽다. Das & Quintyn(2002), Quintyn & Taylor(2002) 등은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신뢰의 손실로 이어지고 좋은 규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어렵다고 강조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연구가설 2〉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책임성은 금융감독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투명성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투명성은 규제기관의 운영이나 정책이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는 강력한 기능을 한다. 또한 투명한 규제는 규제기관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투명성이란 관찰대상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흐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된다. IMF는 금융정책의 투명성을 “규제조치의 목적·틀·결정·근거·자료 및 여타 정보와 책임성이 일반 국민에게 종합적이며 적시에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환경”으로 정의하였다(Das & Quintyn, 2002). 나아가 IMF는 금융규제 기관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과 재정정책의 투명성을 위한 좋은 실무 강령(Code of Good Practices on Transparency in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을 제정하였다.

Das & Quintyn(2002)은 금융규제 기관은 감독기구의 지배구조, 정책, 성과, 규제감독의 목적, 내부감사 및 통제에 관련된 내부정책, 사기 및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한 메커니즘 등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규제 기관은 상거래 안전성(commercial confidentiality)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결정 절차가 허용 가능한 최대한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Quintyn & Taylor, 2002). Quintyn & Taylor(2002)는 규제과정에서의 투명성은 크게 세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금융규제 기관 공무원들의 사적 이해관계나 규제적 포획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그 결과 감독 결과물의 공개는 감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수단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Boot & Thakor(1993)는 감독자의 은행 감독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금융감독자의 사익추구 행동을 모형화하였다. 둘째, 금융감독 과정에서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한다. 셋째, 은행 소유자, 관리자, 임원 들의 신중한 행동과 은행업무에서의 위험 통제에 유의하도록 만드는 도구적 기능을 한다. 고동원(2008)은 금융규제 정책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금융감독 업무의 시행 및 집행 단계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투명성은 감독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차원과 일반국민들에 대한 정보공개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허인혜, 2011). 전자는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간의 정보공유 확대 및 금융불안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팀 구성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후자는 일반국민들에게 금융정책 실무자 및 감독자에 대한 정보, 규제 목적과 성과, 감독의 근거자료,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투명성은 금융규제 기관의 신뢰 증진에 기여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민간이 금융규제 기관의 활동을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규제 기관에 대한 대상기관 종사자들의 신뢰를 증진시킨다. 또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인들과 규제대상이 규제 및 감독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한다(Quintyn & Taylor, 2002).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연구가설 3〉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투명성은 금융감독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감독기관 종사자들이 감독관련 기관간 정보공유의 투명성 정도를 인식하는 데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피감독기관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금융감독기관의 정보공개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 (4) 공정성

일반적으로 공정성이란 합의된 일반 원칙에 따라 정책과 관련된 비용이나 편익이 차별 없이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공정성은 금융규제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제도, 의사결정, 및 절차들이 객관적이며 공평하게 수행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공정성의 유지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병선(2008)은 규제기관의 정책결정은 사회전체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올바른 정책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규제기관의 의사결정은 공정한 절차(due process)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Das & Quintyn(2002)은 공정성을 완결성(integrity)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들은 완결성을 규제 주체가 자신의 행태나 사익으로 인해 타협함이 없이 좋은 규제의 제도적 목적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기제로 정의하고 있다(Das & Quintyn, 2002).

금융감독규제 기관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정과 법에 의한 업무수행 및 윤리강령의 준수는 물론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재량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금융규제 기관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기관의 완결성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Das & Quintyn, 2002). 허인혜(2011)는 금융규제기관 직원들이 청렴한 업무처리를 통해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종수(2001)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의 결정요인으로서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연구가설 4〉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공정성은 금융감독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5) 전문성

전문성은 특정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정의 역량을 의미한다(주상현·안순협, 2002).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전문성은 적절한 감독규정과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허인혜, 2011). 특히 금융의 세계화, 개방화, 민영화 등의 추세에 맞추어 금융규제 기관은 직접규제 외에도 위험관리형 감독부문에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허인혜, 2011). 금융감독 기관은 적절한 감독규정과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과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 2012). 김대식·윤석현(2005)은 금융규제 기구가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감독규제 기관이 규제대상에게 포획되지 않고 규제의 목표와 성과가 괴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다. 특히 시장구조와 기업행위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경제학적 지식과 개별 법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법학 지식, 해당 산업에서의 진입, 가격, 사업영역, 품질 등에 관한 포괄적 규제를 담당해야 하는 많은 관련 정보, 그리고 회계학적 지식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배용수, 2006). 고동원(2008), 허인혜(2011)는 최근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거래 등 매우 복잡한 상품의 출현 등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규제대상 기관을 인도하면서 보다 충실하고 효율성 있는 금융감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감독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학계 및 실무전문가 등 민간전문가에 대한 개방형 채용제도의 확대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허인혜, 2011).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전문성 강화는 규제기관에 대한 대상기관 종사자들의 신뢰 향상으로 이어진다(고동원, 2008). 전문성이 결여되면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을 선도하거나 그들에게 친화적인 감독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김대식·윤석현, 200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연구가설 5〉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전문성은 금융감독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내생변수: 금융감독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와 규제 수용성

일반적으로 신뢰(trust)는 “다른 사람들의 의도나 행동을 긍정적으로 기대함으로써 기꺼이 그들을 믿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Mayer, Davis, & Schoorman, 1995). 따라서 신뢰란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사회조직이나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낸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구성요소로서, 사회체제에서 다양한 주체들을 결속시키고 유지시키는 통합적 기제로 작동한다(Barber, 1983).

신뢰의 하위 개념으로서 정부신뢰는 정부가 부여된 역할과 관련된 의무와 기대를 충족시킬 기능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Barber, 1983; Doney et al., 1998). 이광희(2009)는 정부신뢰를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로 정의하고 있으며, 박홍식·오경민(2002)은 정부신뢰를 정부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기반하여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신념으로 정의한다. 배병룡·이시원(1988)은 정부신뢰는 국민이 자신들의 기대에 근거해 정부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평가적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신뢰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정책이나 행정에 대한 시민의 순응이나 수용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정부신뢰는 정책수용성 제고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Rudolph & Evans, 2005; Newton, 2001; Barber, 1983; 박정훈, 2008; 박정훈·신정희, 2011; 김병섭 1984).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며, 따라서 정책대상 집단이 정책에 순응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저항과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조권중, 2008). 정책대상 집단은 집행기관의 정책의지와 태도,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일관성, 정책집행기관의 능력에 대해서 나름의 지지와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집행기관의 집행의지와 태도가 성실하고,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자의 신뢰성이 높아져 정책 수용의 가능성이 증대된다(정정길, 2001; 배병룡·이시원, 1988). 이처럼 정책대상 집단의 정부신뢰는 원활한 정책집행의 전제 조건이며 정책집행 과정에서 수용성을 증진하여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요인이기도 하다(Chanley, 2000; 박정훈, 2008; 박정훈·신정희, 2011; 김병섭 1984).

금융감독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는 정책대상자인 금융기관과 국민이 규제의 내용을 의심 없이 믿고 순응하려는 태도를 나타낸다. 또한 규제의 수용성은 금융감독기관이 규제나 감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집단인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규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려는 내면적 가치체계나 태도로 정의될 수 있다.

이상에서 정부신뢰가 정책 수용성의 핵심적 결정요인인 것처럼, 금융감독규제 기관에

대한 대상기관 종사자들의 신뢰는 금융규제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허인혜, 2011).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는 규제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통한 규제의 수용성 강화로 이어지기 쉽다.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 발생할 경우 아무리 좋은 금융규제라 하더라도 실패하기 쉽다. 특히, 금융감독규제 기관에 대한 대상기관의 신뢰 상실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실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Group of Ten, 2001).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연구가설 6> 금융감독규제 기관에 대한 대상기관 종사자들의 신뢰는 금융규제의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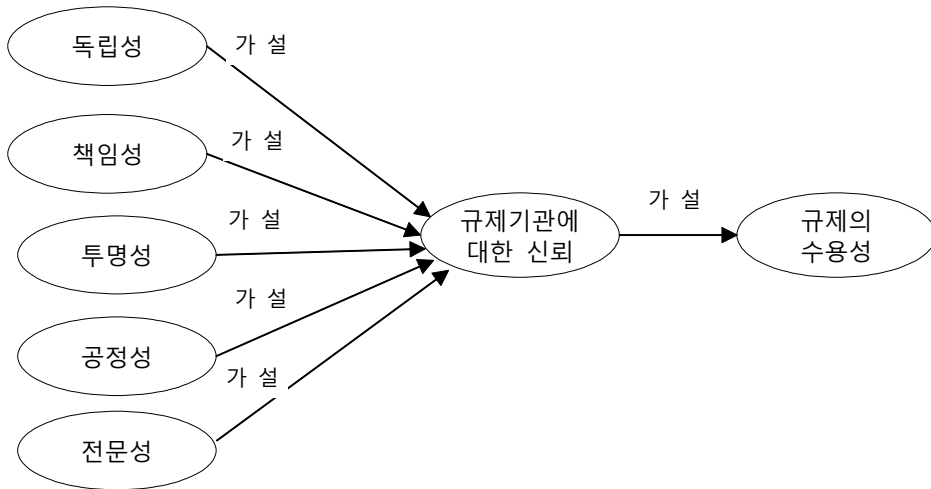
이상의 6개 연구가설 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이 규제기관에 대한 대상기관 종사자들의 신뢰를 매개로 규제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2. 분석의 틀

이상의 <연구가설 1>에서 <연구가설 5>까지 제시된 것처럼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은 규제대상 기관 종사자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이다. 또한 <연구가설 6>에서 제시된 것처럼 금융감독규제 기관에 대한 대상기관 종사자들의 신뢰는 금융규제 수용성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그림 1>의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것처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독립변수로서 금융기관의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이 매개변수인 금융감독규제 기관에 대한 대상기관 종사자들의 신뢰를 매개로 종속변수인 금융규제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변수들은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서 복수의 관찰변수(observed variable)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1> 연구모형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 포함된 7개의 잠재변수들 각각을 측정하기 위해 2-4개의 측정문항들이 이용되었다. 측정문항들은 문헌검토와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다.

독립성은 Quintyn & Taylor(2002), Das & Quintyn(2002), 허인혜(2011), 정운찬·김홍범(2009) 등의 연구를 기초로 금융감독규제 기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되어있는가를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를 위해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성, 정부부처들로부터의 독립성, 규제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책임성은 Das & Quintyn(2002), Hayward(200), 강병호 외(2012), 김대식·윤석현(2005) 등의 연구를 기초로 금융감독규제 기관이 부여된 권한을 책임있게 수행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따른 충실한 업무처리, 국민에 대한 책임, 법규해석의 일관성 등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투명성은 Quintyn & Taylor(2002), Das & Quintyn(2002), 허인혜(2011) 등의 연구를 기초로 금융규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정보의 충분성, 적시성, 구체성 등을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를 위해 공개된 정보가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충분하고, 시의적절하며, 구체적으로 공개되는지를 평가하는 문항들이 측정지표로 이용되었다.



공정성은 Das & Quintyn(2002)의 연구를 기초로 금융감독규제 기관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를 위해 공정한 법집행의 보장, 공정한 절차에 따른 조사업무 수행, 법규에 따른 공정한 처벌의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전문성은 허인혜(2011), 배용수(2006) 등의 연구를 기초로 금융감독규제 기관 직원들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니고 있는가를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상세한 지식, 금융기관 관련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 규제 업무에 관한 충분한 경험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매개변수인 신뢰는 박홍식·오경민(2002), 배병룡·이시원(1988) 등의 연구를 기초로 금융감독규제 기관에 대한 대상기관 종사자들의 신뢰를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를 위해 대상기관 종사자들이 금융규제 기관의 발표나 약속을 신뢰하는지, 금융규제 기관이 공개하는 정보나 통계를 신뢰하는지를 묻는 문항들이 측정지표로 이용되었다.

종속변수인 규제의 수용성은 규제대상 기관이 금융규제를 받아들여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 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지도, 규제에 대한 거부감, 규제의 개선 노력, 규제대상 기관과의 의사소통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을 위해 ‘매우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형 5점 척도가 이용되었다. 잠재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과 함께 인구구성학적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속년수 등을 묻는 문항들이 설문지에 추가로 포함되었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된 설문문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잠재변수와 측정문항

잠재변수	측정문항	명칭
독립성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독립성1
	정부부처들(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독립성2
	규제대상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독립성3
책임성	법적 기준에 따라 충실한 업무처리를 한다	책임성1
	법규해석을 일관성 있게 한다.	책임성2
	국민(규제대상 기관 포함)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앞장서서 해결한다.	책임성3
투명성	규제 관련 정보가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투명성1
	규제 관련 정보가 시기적절하게 공개되고 있다	투명성2
	규제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투명성3
공정성	이의신청제도 등에 의해 공정한 법집행을 보장한다	공정성1
	공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공정성2
	법 위반의 경중에 따라 공정하게 처벌 수준을 정한다	공정성3
전문성	(금융감독규제기관 직원들은) 관련 규정을 자세하게 알고 있다	전문성1
	(금융감독규제기관 직원들은) 금융기관 관련 분야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	전문성2
	(금융감독규제기관 직원들은) 금융기관 규제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경험이 많다.	전문성3
신뢰	금융감독규제 기관이 하는 발표나 약속을 믿을 수 있다	신뢰성1
	금융감독규제 기관이 공개하는 정보나 통계자료를 믿을 수 있다.	신뢰성2
규제 수용성	금융감독규제 기관이 하는 일에 찬성하고 지지하는 편이다.	수용성1
	금융감독규제 정책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	수용성2
	금융감독규제 기관은 금융감독규제 정책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편이다	수용성3
	금융감독규제 기관과 규제대상 기관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수용성4

#### 4. 자료수집 및 분석 절차

본 연구는 금융감독규제 기관과 금융규제에 대한 대상기관 종사자들의 인식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2012년 4월 9일부터 27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대상 기관에는 은행 3개사, 생명보험 2개사, 증권 2개사, 상호저축은행 1개사, 카드사 1개사, 증권투자기관 1개사 등 총 10개의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포함됨으로써 대표성 있는 표본이 확보될 수 있었다.

설문조사를 위해 각 대상기관 종사자 1명을 조사원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유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들 조사원들이 각 대상기관에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총 283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

고, 설문지 회수율은 총 242부(85.5%)였다.

## IV. 분석결과

### 1. 자료 및 기술통계 분석결과

응답자의 성비는 남성 61.2%(148명), 여성 38.8%(94명)였으며, 연령은 30-40대가 78.5%(19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졸이 66.9%(162명)로 가장 많았으며, 직급은 대리 이하가 50.0%(12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근속년수는 11-15년이 31%(75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3>은 응답자들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응답자들의 인구구성학적 특성(N=242)

구분	속성	빈도	비율	구분	속성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48	61.2	직급	대리 이하	121	50.0
	여성	94	38.8		과장	37	15.3
	합계	242	100.0		차장 이상	84	34.7
			합계		242	100.0	
연령	20대 미만	39	16.1	근속 기간	5년 이하	77	31.8
	30대	117	48.3		6-10년	51	21.1
	40대	73	30.2		11-15년	75	31.0
	50대	13	5.4		16-20년	25	10.3
	합계	242	100.0		21-25년	10	4.1
학력	고졸 이하	23	9.5		26-30년	4	1.7
	대재/전문대	34	14.0		합계	242	100.0
	대졸	162	66.9				
	대학원졸	23	9.5				
	합계	242	100.0				

다음으로, 잠재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된 설문문항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문성(2.97-3.05)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정성(2.71-2.73), 투명성(2.58-2.6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성(평균=3.01)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평균은 보통(3점) 이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응답의 평균은 전

문성(3.01), 공정성(2.72), 투명성(2.63), 규제 수용성(2.68), 신뢰(2.64), 책임성(2.52), 독립성(2.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는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기술통계 분석결과

잠재변수	관찰변수	평균	표준편차	잠재변수	관찰변수	평균	표준편차
독립성	독립성1	2.02	0.93	전문성	전문성1	2.97	0.81
	독립성2	2.12	0.89		전문성2	3.05	0.85
	독립성3	2.57	1.04		전문성3	3.00	0.78
책임성	책임성1	2.76	0.94	신뢰	신뢰성1	2.40	0.87
	책임성2	2.43	0.96		신뢰성2	2.88	0.89
	책임성3	2.31	0.83	규제 수용성	수용성1	3.00	0.88
투명성	투명성1	2.58	0.85		수용성2	2.61	0.88
	투명성2	2.68	0.82		수용성3	2.67	0.82
	투명성3	2.63	0.84		수용성4	2.44	0.81
공정성	공정성1	2.73	0.78				
	공정성2	2.72	0.86				
	공정성3	2.71	0.86				

## 2.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결과

본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하여 LISREL 8.8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그림 1>의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은 확증적 모형화(confirmatory modeling)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은 잠재변수경로분석(latent variable path analysis)으로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후, 구조모형과 측정모형을 결합하고 필요한 모수들을 추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해 원 데이터의 공분산행렬을 투입자료로 이용하였으며, 모수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이 이용되었다.

### 1)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 7개 잠재변수들 각각은 2-4개의 측정지표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측정되었다.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은 측정지표들이 잠재변수들을 얼마나 적절히 대표

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신뢰도 평가에는 내적일관성을 파악하는 Cronbach- $\alpha$ , 추출평균분산(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종합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가 이용되었다(Hair et al., 1992).<sup>4)</sup> 또한 잠재변수들에 대한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포함하는 구성개념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적재치의 크기와(Anderson & Gerbing, 1988) 추출평균분산(AVE) 검증방법이(Fornell & Larcker, 1981) 이용되었다.<sup>5)</sup>

잠재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된 측정지표들의 신뢰도는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의 측정모형 평가결과에서 제시된 것처럼 각 잠재변수의 Cronbach- $\alpha$ 는 0.76-0.88로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AVE도 0.60-0.72로 우수하였으며, CR 역시 0.74-0.88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측정모형 평가결과

잠재변수	관찰변수	표준화적재치	Chronbach- $\alpha$	AVE	종합신뢰도
독립성	독립성1	0.80	0.76	0.60	0.81
	독립성2	0.94			
	독립성3	0.52			
책임성	책임성1	0.80	0.83	0.63	0.84
	책임성2	0.86			
	책임성3	0.72			
투명성	투명성1	0.80	0.88	0.71	0.88
	투명성2	0.87			
	투명성3	0.87			
공정성	공정성1	0.84	0.88	0.71	0.88
	공정성2	0.87			
	공정성3	0.82			
전문성	전문성1	0.88	0.88	0.72	0.89
	전문성2	0.89			
	전문성3	0.78			
신뢰	신뢰성1	0.81	0.77	0.60	0.74
	신뢰성2	0.72			
규제 수용성	수용성1	0.75	0.85	0.60	0.85
	수용성2	0.75			
	수용성3	0.80			
	수용성4	0.77			

$$4) \text{ 종합신뢰도(CR)} = \frac{(\sum \text{표준화적재치})^2}{(\sum \text{표준화적재치})^2 + (\sum \text{측정오차})}, \text{ CR} > 0.6 \text{ 이면 우수}$$

$$5) \text{ 추출평균분산(AVE)} = \frac{(\sum \text{표준화적재치})^2}{(\sum \text{표준화적재치})^2 + (\sum \text{측정오차})}, \text{ AVE} > 0.5 \text{ 이면 우수}$$

다음으로 잠재변수들에 대한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포함하는 구성개념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집중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요인적재치가 낮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독립성3(0.52)을 제외한 모든 지표들이 0.70 이상의 높은 표준화적재치를 보였으며, 모두  $\alpha < 0.05$ 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잠재변수들의 집중타당도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판별타당도는 AVE를 계산하고 잠재변수간 상관관계 행렬을 구성함으로써 검증하였다.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AVE는 0.60-0.72이었고,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제곱값( $r^2$ ) 0.07-0.53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2) 연구모형 검증: 잠재변수 경로분석

연구모형의 검증은 전반적인 적합도에 대한 평가와 잠재변수들간의 개별적인 경로계수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다.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절대적합도 지수인 GFI, RMSEA와 상대적합도 지수인 상대- $\chi^2$ , NNFI, CFI가 포함되었다.

<표 6> 모형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chi^2(df)$	RMSEA	NNFI	CFI	GFI
통계치	289.66(173), $p=0.00$	0.049	0.99	0.99	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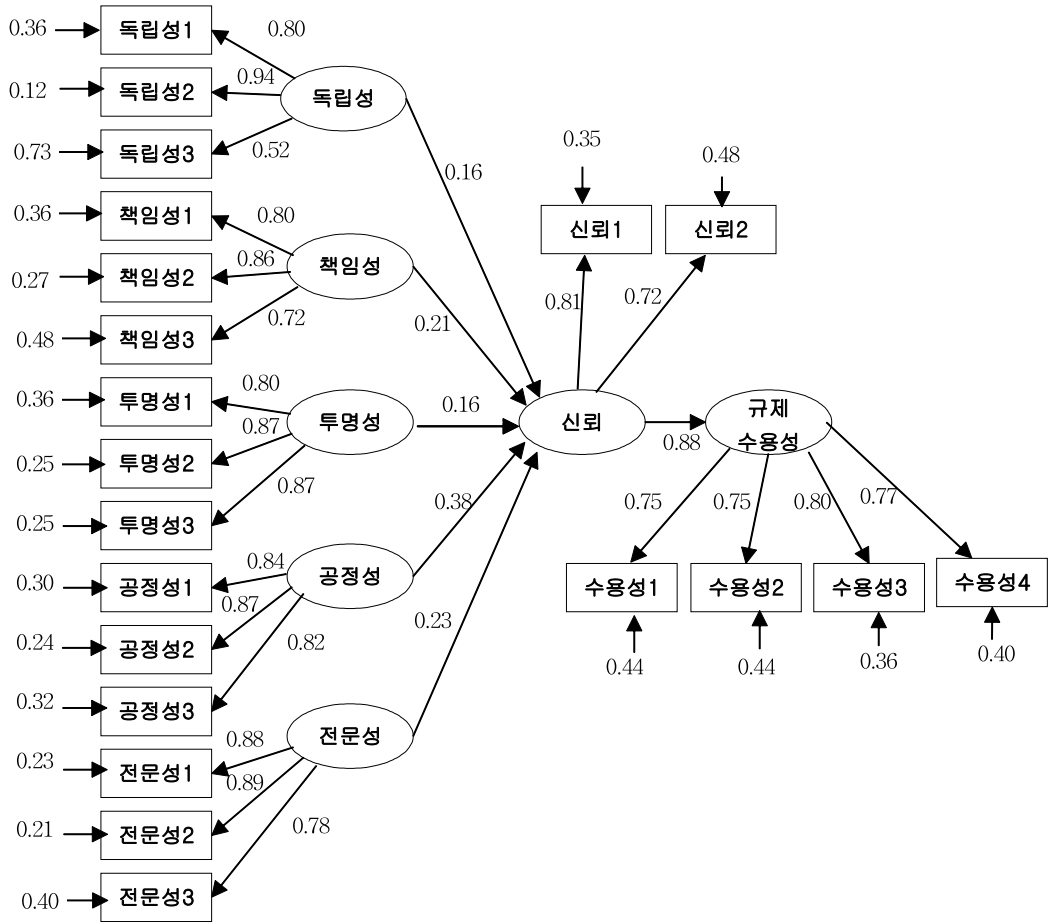
전통적인 적합도 지수인  $\chi^2$  값은 289.66(df=173,  $p=0.00$ )으로 나타났으나,  $\chi^2$  검증이 표본 크기에 지나치게 민감한 문제점을 고려하여(Kline, 1998) 다른 적합도 지수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RMSEA는 0.049( $< 0.05$ ), NNFI는 0.99( $\geq 0.95$ ), CFI는 0.99( $\geq 0.95$ ), GFI는 0.90( $\geq 0.90$ )으로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일반적인 기준을 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모형에 의해 예측된 공분산행렬이 데이터에서 실제로 관측된 공분산행렬과 상당히 일치하며,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관찰된 데이터를 상당히 잘 표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검증한 다음 6개 연구가설에서 제시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변수들간의 개별적인 경로계수를 평가하였다. <표 7>은 잠재변수간 표준화경로

6) 이 검증방법에서 추출평균분산(AVE)과 잠재변수간 상관관계 제곱값( $r^2$ )을 비교해 그 차이가 크면 판별타당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Fornell & Larcker, 1981).

계수( $\beta$ )와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는 표준화경로계수( $\beta$ )와 측정오차가 포함된 잠재변수경로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잠재변수경로분석 결과



〈표 7〉 가설의 검증 결과

경로	예측방향	$\beta$	$t$	검증결과
가설1: 독립성→신뢰	+	0.16	2.56	지지
가설2: 책임성→신뢰	+	0.21	2.22	지지
가설3: 투명성→신뢰	+	0.16	2.07	지지
가설4: 공정성→신뢰	+	0.38	4.48	지지
가설5: 전문성→신뢰	+	0.23	3.97	지지
가설6: 신뢰→규제 수용성	+	0.88	11.07	지지

개별 경로계수들을 살펴보면, 독립성과 신뢰의 관계는 가설의 예측방향(+)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경로계수는( $\beta=0.16$ ) 통계적으로 유의한( $t=2.56$ ,  $p<0.05$ )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책임성과 신뢰의 관계도 가설의 예측방향(+)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경로계수는( $\beta=0.21$ ) 통계적으로 유의한( $t=2.22$ ,  $p<0.05$ )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2>는 지지되었다. 투명성과 신뢰의 관계도 가설의 예측방향(+)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경로계수는( $\beta=0.16$ ) 통계적으로 유의한( $t=2.07$ ,  $p<0.05$ )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3>은 지지되었다. 공정성과 신뢰의 관계는 가설의 예측방향(+)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경로계수는( $\beta=0.38$ ) 통계적으로 유의한( $t=4.48$ ,  $p<0.05$ )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4>는 지지되었다. 전문성과 신뢰의 관계도 가설의 예측방향(+)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경로계수는( $\beta=0.23$ ) 통계적으로 유의한( $t=3.97$ ,  $p<0.05$ )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5>는 지지되었다. 매개변수인 신뢰와 종속변수인 규제 수용성의 관계도 가설의 예측방향(+)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경로계수는( $\beta=0.88$ )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t=11.07$ ,  $p<0.05$ )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6>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이 높을수록, 금융감독규제 기관에 대한 대상기관 종사자들의 신뢰가 증대됨을 보여준다. 또한 규제대상 기관의 신뢰가 증대될수록 금융규제의 수용성이 증대됨을 나타낸다.

잠재변수들 간 관계의 강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은 종속변수인 규제 수용성에 대해 신뢰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규제 수용성에 대한 외생변수들의 간접효과는 공정성 0.33, 전문성 0.20, 책임성 0.18, 독립성과 투명성이 각각 0.14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신뢰가 규제 수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88이었다. <표 8>은 규제 수용성에 대한 각 외생변



수와 신뢰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8〉 규제 수용성에 대한 각 변수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표준화경로계수

잠재변수	신뢰	규제 수용성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독립성	0.16	-	$0.16 \times 0.88 = 0.14$	0.14
책임성	0.21	-	$0.21 \times 0.88 = 0.18$	0.18
투명성	0.16	-	$0.16 \times 0.88 = 0.14$	0.14
공정성	0.38	-	$0.38 \times 0.88 = 0.33$	0.33
전문성	0.23	-	$0.23 \times 0.88 = 0.20$	0.20
신뢰	-	0.88	-	0.88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금융규제의 수용성에 관한 인과모형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은 금융감독규제 기관에 대한 대상기관 종사자들의 신뢰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금융감독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는 규제의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규제기관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신뢰의 증진은 규제의 수용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금융감독규제 기관의 특성이 대상기관의 신뢰와 규제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학문적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이상의 연구결과는 금융규제 정책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평균이 보통(3점) 이하로 나타남으로써 금융규제에 대한 대상기관의 전반적인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전문성(3.01)만 보통(3점) 수준일 뿐 나머지 공정성(2.72), 투명성(2.63), 책임성(2.52), 독립성(2.24) 등 신뢰의 영향요인들이 모두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금융감독규제 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상을 가지고 부여된 역할을 공정하고, 투명하며, 책임있게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최근 2011-2012년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실 패로서 금융감독 기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규제 집행기관인 금융

감독원은 부실한 감시기능에 따른 저축은행부실 사태의 원인 제공은 물론 저축은행에 대한 특혜, 금품수뢰 등으로 ‘금융비리원’이나 ‘금융강도원’이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다(허인혜, 2011). 금융감독규제 기관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대상기관 종사자들의 신뢰 저하는 물론 금융규제 정책에 대한 수용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금융규제 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7-1998년 IMF 구제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규제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그 결과 1998년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1999년에는 통합된 금융감독기구로서 금융감독원이 각각 출범하였다. 2004년 참여정부에서도 신용카드 부실사태가 벌어지면서 금융규제 체제 개편 논의가 또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당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2007년 말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도 금융규제 체제 개편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로 금융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었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통해 금융규제의 실패가 사태의 핵심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개편 논의는 또 다시 탄력을 얻고 있다. 매번 논의의 핵심은 금융규제 기구가 정부와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또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금융감독원의 실질적인 독립과 금융위원회의 기획재정부로의 소속변경(허인혜, 2011), 국회의 금융위원회 위원 추천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한 것은 정치적 압력이나 영향력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중립적이고 책임있는 금융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무총리 산하의 협의제 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공적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이 집행을 보조하는 현행 시스템은 금융감독 조직의 관료제화는 물론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김대식·윤석현, 2005). 또한 금융감독 기관의 책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독기관 간에 정책과 감독기능이 혼재되어 있는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금융감독 실패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금융규제 기관 각각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엄중한 법적, 경제적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불법적인 사건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권과 행정부로부터의 금융규제 기구의 독립성 확보는 물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정책과 집행기능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허인혜, 2011; 김대식·윤석현, 2005).

셋째, 금융규제 기관의 투명성(2.63) 측면에서 낮은 평가가 나온 점은 금융규제 기관의 규제 결정과 업무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하지 못한 규제 업무는 대상기관은 물론 국민들의 불신과 소외감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된다. 정부는 감독유관기관,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감독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감독·검사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시켜야 한다(허인혜, 2011). 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책실무자 및 감독자에 대한 정보, 금융감독 정책의 목적과 성과, 감독의 근거자료, 내부감사 및 통제 관련 정책, 내부 의사결정과정 등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충분하게 제공해야 함을 뜻한다. Quintyn & Taylor(2002)이 강조한 것처럼 금융규제 기관은 반드시 보안이 필요한 최소부분을 제외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대안으로 기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간 금융정보 공유시스템을<sup>7)</sup> 보다 강화함으로써 금융규제 기관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금융감독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 향상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특히 저축은행 감독부실로 인해 금융규제 기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가 급속히 저하되면서 신뢰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정부의 금융규제 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금융규제는 권력의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정부는 보다 많은 규제를 통해 권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금융규제 기관은 일방적인 규정과 지침에 근거해 만들어진 절차를 강제하는 권력기관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민주적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규제대상 집단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금융규제 기관의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신뢰의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규제 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PR(public relations)을 넘어 금융규제 정책에 대한 시민과 정부간의 호혜적 신뢰(reciprocal trust)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는 과거 신용카드 사태나 저축은행 부실의 문제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스스로의 금융규제의 부실을 문제로는 보지 않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은 직접적으로는 금융규제에 대한 대상기관의 불신으

7) '09.9.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은 금융시장 위협요인의 조기인지 및 대응을 통해 시스템 위험을 최소화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규제 정책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불신과 도덕적 해이만을 문제로 지적할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규제대상 기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금융규제 기관의 신뢰회복 노력은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업무 중복에 대한 명확한 분리는 물론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금융권력의 분산을 전제로 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결정 기능에만 집중하도록 감독권한을 최소화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설문문에 참여한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경력 측면에서 5년 이하 또는 대리급 이하가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응답자의 편중현상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표본추출을 통해 연구결과의 외적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규제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일반 국민들의 규제 수용성을 다루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들을 통해 금융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병호.(2005). 우리나라 금융감독 및 자율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14(1): 181.
- 강병호·김대식·박경서.(2012). 금융기관론. 서울: 박영사.
- 고동원.(2008). 금융규제와 법. 서울: 박영사.
- 금융감독원.(2012). 금융감독개론. 서울: 금융감독원 인재개발원.
- 김대식·윤석현.(2005). 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 향후 개편방향. <한국금융학회보>. 10(10): 201-239.
- 김병섭.(1984).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현대사상연구>, 1: 61-88.
- 김용우.(1998). 규제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김용재.(2004). “금융감독행정의 과제와 입법적 고찰”. <금융법연구>. 1(2): 3-50.
- \_\_\_\_\_.(2010). 은행법. 서울: 박영사.
- 김종석·김태운.(2004). 독립규제위원회의 발전방향. 한국경제연구원.
- 김홍범.(2002). 금융감독, 이대론 안 된다. 서울: 도서출판 두남.
- 남주하·김정렬·이규복.(2012). 금융위기와 한국의 금융제도 개혁. 서울: 울곡출판사.

- 박정훈(2008), “정부신뢰와 정책수용 전자주민카드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6(1): 93-122.
- 박정훈·신정희(2011). “정부신뢰, 정책효능성, 정책지지간의 연관성 실증연구: 주거지역내 CCTV 설치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8(3): 1-24.
- 박홍식·오경민.(2002). “정부신뢰 수준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3): 113-138.
- 방영민. (2010). 금융의 이해. 서울: 법문사.
- 배병용·이시원.(1988). “정부불신의 원인과 결과”. <한국행정학보>. 22(2): 393-427.
- 배용수.(2006). 규제정책론. 서울: 대영문화사.
- 산업연구원.(2001). 네트워크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경쟁과 규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_\_\_\_\_.(2002). 기업활동의 자유와 규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광희.(2009). 신뢰와 거버넌스 일반국민 인식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이중수.(2001). “정부에 대한 신뢰와 그 결정요인”. <사회과학논집>. 32: 67-86.
- 이중환.(2005). 분야별 규제영향분석: 금융분야.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정운찬·김홍범.(2009). 화폐와 금융시장. 서울: 율곡출판사.
- 정정길.(2001).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 조권중.(2008). 도시거버넌스의 사회적 신뢰형성 기제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주상현·안순협.(2002). “공무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전라북도 읍·면·동 사회복지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3): 14-166.
- 최병선.(2008).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 한국금융연구원.(2011). 한국금융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KIF 금융리포트>. 2011-07.
- 한국법제연구원.(2001). “은행산업의 소유구조 규제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1-11.
- 허인혜.(2011). 한국 금융감독시스템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색. <한국정책학보>. 20(4): 18-20.
- Acharya, V. V. (2009). A theory of systemic risk and design of prudential bank regulation. *Journal of Financial Stability*, 5, 224-255.
- Alford, D. E. (2005).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An Enforceable International Financial Standard?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28(2), 237-296.
- Barber, B.(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Barth, J. R., Caprio, Jr. G., & Levine, R. (2001). Financial regulation and performance: Cross-country evidence. *Central Bank of Chile Working Papers*(118).
- \_\_\_\_\_. (2004). 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What works best? *Journal of Financial*

- Intermediation, 13, 205-248.
- Benston, G. J. (2000). Is Government Regulation of Banks Necessary?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18(2/3), 185-202.
- Benston, G. J., & Kaufman, G. G. (1996). The Appropriate role of bank regulation. *The Economic Journal*, 106(436), 688-697.
- Bhattacharya, S., Boot, A. W. A., & Thakor, A. V. (1998). The Economics of bank regulation.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30(4), 745-770.
- Boot, A. W. A., & Thakor, V. (1993). Self-interested bank regul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3(2), 206-212.
- Carletti, E. (2005). *Competition and regulation in banking*. Unpublished paper.
- Carletti, E., & Vives, X. (2007). *Regulation and Competition Policy in the Banking Sector. Paper presented at the Financial Market Regulation in Europe*, CESifo Conference Center, Munich.
- Chanley, V. A. (2000),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64(3): 239-256.
- Currie, C. (2006). A new theory of financial regulation: Predicting, measuring and preventing financial crise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5, 48-71.
- Das, U. S., & Quintyn, M. (2002). Crisis prevention and crisis management: The role of regulatory governance. *IMF Working Paper(WP/02/163)*.
- Doney, P. M., Cannon, J. P. & Mullen, M. R. (1998).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National Culture on the Development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601-620.
- Fischel, D. R., Rosenfield, A. M., & Stillman, R. S. (1987). The Regulation of Banks and Bank Holding Companies. *Virginia Law Review*, 73(2), 301-338.
- Friedman, S. J., & Friesen, C. M. (1984). A new paradigm for financial regulation: Getting from here to there. *Maryland Law Review*, 43(3), 413-462.
- Fornell, C. & Larcker, D. F.(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Feb.): 39-50.
- FRB. (2005). The Federal Reserve System Purposes & Functions. FRB, *Purpose & Functions*, 9th. ed. 108.
- Gilad, S. (2008). Accountability or expectations management? The role of the ombudsman in financial regulation. *Law & Policy*, 30(2), 227-253.
- Goodhart, C. (Ed.). (1998). *The emerging framework of financial regulation*. London: Central Banking Publications Ltd.

- Group of Ten.(2001). *Report on Consolidation on the Financial Sector*. January: 126.
- Hair, J. E.,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2).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3rd ed). N.Y.: Prentice Hall.
- Hayward, P. (2000). "The Financial Sector-The Responsibilities of the Public Agencies," *The Monetary and Exchange Affairs Department Operational Paper*, MAE OP/OO/XX,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ctober 2000.
- Hellmann, T. F., Murdock, K. C., & Stiglitz, J. E. (2000). Liberalization, moral hazard in banking, and prudential regulation: Are capital requirements enoug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0(1), 147-165.
- Jackson, H. E. (2007). Variation in the intensity of financial regulation: Preliminary evidence and potential implications. *Yale Journal on Regulation*, 24, 253-290.
- John, K., Saunders, A., & Senbet, L. W. (2000). A theory of bank regulation and management compensation.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13(1), 95-125.
- Keys, B. J., Mukherjee, T., Seru, A., & Vig, V. (2009). Financial regulation and securitization: Evidence from subprime loan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6, 700-720.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Press.
- Lindgren, C., Balifio, T. J. T., Enoch, C., Gulde, A., Quintyn, M., & Teo, L. (1999). Financial sector crisis and restructuring: Lessons from asia. *IMF Occasional Paper*, 188.
- Llewellyn, D. (1999). The Economic rationale for financial regulation. *FSA Occasional Papers in Financial Regulation*.
- Majone, G. (2005). "Strategy and Structure the Political Economy of Agency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i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signing Independent and Accountable Regulatory Authorities for High Quality Regulation*, Working Party on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 Proceedings of an Expert Meeting in London, United Kingdom, January 10-11, 2005: 126-155.
- \_\_\_\_\_. (1997). From the positive to the regulatory stat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anges in the mode of governance. *Journal of Public Policy*, 17(2), 139-167.
- Matutes, C., & Vives, X. (2000). Imperfect competition, risk taking, and regulation in banking. *European Economic Review*, 44, 1-34.
- Mayer, R. C., James, D.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 Morris, S., & Shin, H. S. (2008). Financial Regulation in a System Context.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08(Fall), 229-261.

- Newton, K. (2001),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2): 201-214.
- Pan, E. J. (2011). Structural reform of financial regulation. *Transnational Law & Contemporary Problems*, 19(winter), 797-867.
- Quintyn, M., & Taylor, M. W. (2002). Regulatory and supervisory independence and financial stability. *IMF Working Paper(WP/02/46)*.
- Rudolph, T. J. & Evans, J. (2005), "Political trust, ideology, and public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9(3): 660-671.
- Santos, J. A. C. (2000). Bank capital regulation in contemporary banking theory: A review of the literature. *BIS Working Papers*(90).
- Stallings, B., & Studart, R. (2002).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emerging markets*, Discussion paper No. 2002/45: United Nations University: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 Truman, E. M. (2009). International Finance Conference. November 10\_11, 2009, Seoul, Korea. 'Lessons from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Truman(前 미국 재무부 차관보)기조 연설에서 인용
- Walsh, J. H. (2008). Institution-Based Financial Regulation: A Third Paradigm.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49(2), 381-412.
- Weber, R. F. (2010). New governance, financial regulation, and challenges to legitimacy: The example of the internal models approach to capital adequacy regulation. *Administrative Law Review*, 62(3), 1-132.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한국은행 2011년 경제통계시스템 ECOS



---

**김 효 기:**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금융정책, 금융감독 규제정책,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이다. 석사학위 논문은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과 법률적 문제”이다(exchange0001@yahoo.co.kr).

**심 준 섭:** 미국 뉴욕주립대(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Exploration of Alternative Designs for Judgment Analysis Application in Public Policy Formulation, 2002)를 취득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의사결정론, 갈등관리와 협상론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갈등프레임이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2011)”, “언어네트워크분석 기법을 활용한 갈등프레임의 분석(2011)”,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 분석: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중심으로(2011)” 등이 있다(jsshim@cau.ac.kr).

논문투고일: 2012.7.18 / 심사일: 2012.9.10 / 게재확정일: 2012.9.30